U대회 특별법 초안 무슨 내용 담았나

흑자대회 치르게 수익사업 크게 늘려

체육 인프라 확충 법적 근거도 마련
국무총리 위원장 지원위원회 설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 특별법안'(이하 U대회 특별법)은 대회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흑자 대회를 치르기 위한 각종 수익사업의 허용, 세제 전폭 지원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과 정의화 의원이 9월 정기국회에서 공동발의할 U대회 특별법은 우선 U대회 준비를 위한 법적 기구인 U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근거가 담겨 있다.

◇**U대회 조직위원회**=U대회 특별법은 지난 2003년 대구 U대회 등 국내에서 치러진 대회와 관련한 특별법과 맥을 같이 하지만, 조직위의 수익 사업 등 활동범위가 크게 넓혀졌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법안 11조~18조까지는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사례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휘장사업, 기념주화 판매, 기념우표 등의 발행, 택지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폭넓게 허용하는 문구도 들어있다.

여기에는 국민체육진흥 복권 등을 추가 발행해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U대회 조직위원회에 배분토록 하는 내용과 조직위가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해서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도 있다.

◇**국무총리 소속 U대회 지원위원회 설치**=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U대회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부처 13명의 장관, 대한체육회장, 광주시장, U대회 조직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원위원회의 산하에 활동을 위해서는 지원위원회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실무위원회를 두되,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과 수익사업**=대회 관련 시설의 전폭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별법 26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체육 인프라를 대회 개최 기간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있다. 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대회 관련 시설을 입지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법안으로 명문화 됐다. '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제한 구역 및 체육공원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만든 김영진 의원은 "U대회 특별법은 차질없는 대회 준비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 법안이 제정될 경우 U대회에 참가하는 해외 선수들에게 민주·평화·인권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심는 한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광주 개최 확정 이후 특별법 제정 등 U대회 준비가 활기를 띄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2015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성공 시민 한마당. 〈광주일보 자료사진〉

"사교육 없애야 공교육 살아 서울대 등 지역 할당 높여야"

李 대통령 시·도교육감 오찬 간담회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현재와 같은 대학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초·중·고교 교육은 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을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는 게 나의 소망"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학생들이 사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감들이 점수 위주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당부하고 "가난한 학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못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멈춰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대학들이 도입을 추진중인 입학 사정관제와 관련,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한 뒤 "입학사정관은 전직 총장분들을 위주로 선발하면 좋을 것 같다"며 "경험있고 신망 있는 분들이 맡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도 설명하고 설득해서 이해를 돕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울대 등 국립대도 성적 위주 선발보다는 현행보다 더욱 지역·계층별 할당을 높여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의 자신을 있게해준 삶의 은인으로 3명을 소개했다"면서 "집안 형편으로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길에서 장사를 하던 이 대통령의 손을 이끌고 야간고에 가게 해준 선생님,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 매번 들렀던 청계천 헌책방의 주인, 대학등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 자리를 소개해준 재래시장 상인들의 기억을 되짚었다"고 소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입시고통에서 벗어난 즐거운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간 연계와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장수 강원도 교육감은 "학생의 창의력과 가정경제를 멍들게 하는 사교육비 문제는 사회구성원의 합심된 노력으로 반드시 풀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사회대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현황, 시도교육감들은 교육현장 변화 우수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김장환 전남도 교육감은 전남형 전원학교, 지역산업 연계 전문계고 지원정책,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 학교 육성 정책을 소개했고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은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체제, 영어교사 해외 영어수업 실습 프로젝트, 창의력 신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시스템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OECD "한국경제 내년 3.5% 성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4일 한국경제가 올해 -2.2% 성장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세계교역의 회복에 힘입어 3.5% 성장하면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국제기구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경제회복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러나 경제회복 이후에는 세제개혁과 정부지출 축소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이날 발표한 세계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2009년에 -2.2%에 머물겠지만 2010년에는 3.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작년 11월의 전망치인 2009년 2.7%, 2010년 4.2%보다는 많이 낮아진 것이지만 각국의 전망치를 모두 낮췄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전망만 악화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 평균과 같고 내년 성장률은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전망돼 고용부진은 내년까지도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봤으며 수출은 올해 -10.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7.0%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2.5%, 내년 2.0%로 안정되고, 경상수지는 올해가 GDP 대비 3.3% 흑자, 내년은 1.7%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지는 추경편성 등 지출 확대로 인해 올해 GDP 대비 1.2% 적자에서 내년에는 2.3% 적자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 '뜨거운 감자' 대검 중수부

기능 일부 조정…폐지까진 안갈 듯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의 전격적인 검찰총장 내정으로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당장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기수파괴를 통한 '발탁인사'의 메시지가 검찰 개혁으로 읽히는 만큼 천 내정자는 총장에 정식 취임하면 야권과 진보진영이 폐지를 요구하는 중수부를 어떤 방식으로든 손을 대야 할 형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조직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검찰총장) 인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검찰 사정기능의 중추인 중수부의 가시적인 변화를 사실상 주문했다.

특히 임채진 전 검찰총장의 중도퇴진이노 전 대통령 서거의 후폭풍에서 비롯한 만큼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 주체였던 중수부의 변화가 없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을 무마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에선 "기능과 조직이 변할 수는 있지만 폐지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상황논리가 아무리 엄중하다 해도 우리나라 최고의 수사역량을 자랑하는 중수부의 공적과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천 지검장은 대대적인 쇄신인사와 기존 수사관행의 개선 등을 토대로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해 중수부 폐지론에 대응하는 동시에 중수부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 폐지론이 다시 불거지게 된 만큼 조만간 단행될 검찰 인사에서 이인규 중수부장(사법시험 24회)을 비롯한 박연차 게이트의 수사라인이 어떤 대접을 받게될 지도 관심거리다. /연합뉴스